

2022년 네팔 총선 결과와 집권당의 과제

김도연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dykim@kiep.go.kr, 044-414-1257)

남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백종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전문연구원 (jhpek@kiep.go.kr, 044-414-1323)

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차 례

1. 네팔 개요 및 2022년 총선 결과
2. 집권당의 과제와 정책 방향
3. 시사점

주요 내용

- ▶ 2022년 11월 20일에 실시된 총선에서 현 여당인 네팔 회의당(Nepali Congress)이 최다 의석을 차지하였으나 단독 과반은 확보하지 못해, 재집권을 위한 연정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총선의 핵심 이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 및 높은 물가 등의 경제 문제'와 '인도, 중국, 미국과의 외교관계'였음.
 - 네팔 회의당이 기존의 동맹을 중심으로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신생 정당 및 무소속 하원의원과 연정을 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네팔 정치의 큰 구심점이었던 공산주의 정당의 입지는 크게 축소되었음.
 - 총선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회복세를 이어갈 안정적인 정치세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망과 네팔의 오래된 '파벌 정치'에 대한 피로감 및 심판으로 해석되며, '정치 세대교체'에 대한 희망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 네팔 회의당 중심의 새 정부는 '경제회복'과 '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두고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IMF 프로그램의 개혁정책을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추진하되,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인도와의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중국과는 적절한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양국으로부터 개발자금을 확보하고, 네팔-인도, 네팔-중국 국경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임.
 - 총선 승리를 이끈 데우바(Deuba) 총리의 대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는 '네팔 콤팩트'의 전력 및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 우리 정부는 남아시아 정세 안정화와 네팔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네팔이 원조 공여국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인프라 사업 △경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인력 교육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수 있음.

1. 네팔 개요 및 2022년 총선 결과

■ 다민족·다문화 국가인 네팔은 농업 중심의 최빈개도국으로, 정치체제는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이고 총리가 정부의 수장인 내각책임제임.¹⁾

- 남아시아에 위치한 네팔은 인도 및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그림 1 참고), 인구는 약 2,800만 명임.
- 126개의 카스트 계층과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팔어를 포함하여 123개의 언어가 사용됨.
- 인구의 약 81%가 힌두교로 인도(80%)보다 힌두교의 비중이 높으며, 이외에 불교(9%), 무슬림(4%) 인구도 있음.
- 네팔은 UN이 지정한 최빈개도국으로, 인구의 4분의 1이 빈곤선 이하에 포함되어 있음.
 - 2021년 기준 네팔의 GDP는 363억 달러, 1인당 GDP는 1,223달러 수준임.
 - 농업이 국민총생산의 30%, 총고용의 80%를 차지하며, 네팔 경제는 관광업 및 해외 송금에도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세계은행, 미국, 인도, 중국 등으로부터의 개발원조가 네팔의 재정수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²⁾
- 대통령은 간접선거제도를 통해 선출되며, 총리는 하원에서 선출됨.
- 의회는 양원제이며, 상원 의석수는 59석, 하원의 의석수는 275석임.
 - 하원 275석 중 165석은 소선거구 1인대표제(FPTP)³⁾를 통해 선출하고, 110석은 비례대표제를 통해 선출함.

■ 네팔에서는 정당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해 정치체제의 변동성이 높음.

- 2001년 네팔 왕실 대학살 사건으로 사회적 불안이 극대화되면서 내전이 시작되었고, 장기간의 정정불안 이후 2008년에 왕정이 폐지되고 연방민주공화제가 출범함.
 - 네팔의 정치체제는 20세기 후반까지 200년 이상 지속된 절대왕정 체제를 벗어나 1999년 입헌군주제, 2008년 연방민주공화제 등으로 변화해옴(그림 2 참고).
 - 네팔은 민주화 과정에서 극심한 갈등 및 분쟁을 겪었으며, 1990년 중반부터 10여 년 동안의 내전으로 약 1만 3,000명이 사망하고 약 1,300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됨.⁴⁾
 - 2015년 네팔 신헌법 제정을 통해 네팔 시민의 기본권·평등권·정치참여권 등이 보장됨.
- 입헌군주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27명의 총리가 선출되는 등 매우 잦은 정권교체가 발생함.⁵⁾
 - 빈번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은 부재하며, 소수의 정치 지도자들이 번갈아 집권하는 이른바 회전문 정부(revolving-door governments)의 양상을 보임.
 - 데우바(Deuba) 현 총리는 총 5차례 집권하였으며, 올리(Oli) 전 총리는 2번 집권함.⁶⁾

1) EIU, CIA, UN, World Bank, 네팔 통계청(검색일: 2022. 12. 5) 등의 국가 프로필을 참고함.

2) 네팔 연간 예산의 약 30%가 원조(aid)로 구성됨. "Key issues in Nepal's national elections"(2022. 11. 18), *The Pr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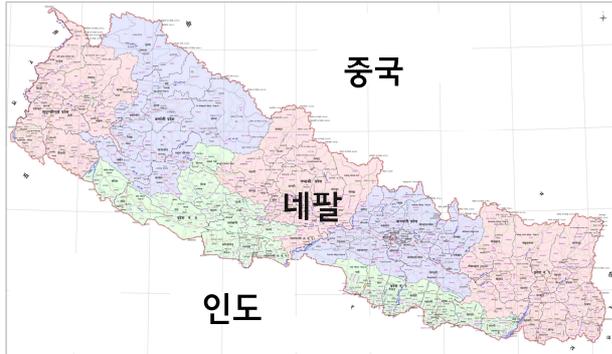
3) First Past the Post의 약자로, 개별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1인을 선출하는 방식을 뜻함.

4) UNHCR(2012), "Nepal conflict report: An analysis of conflict-related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etween February 1996 and 21 November 2006."

5) Government of Nepal,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nd Council of Ministers 웹사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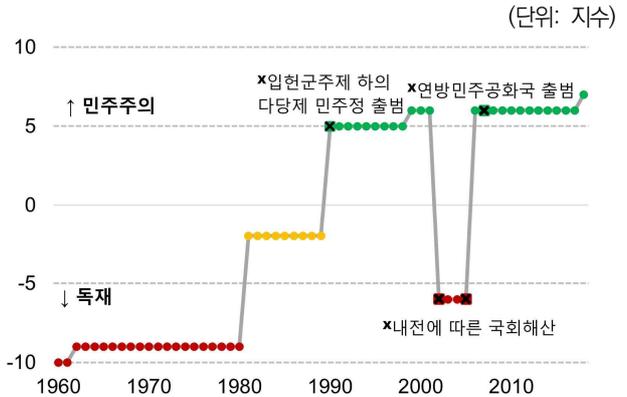
6) 데우바 현 총리는 1999년, 2001년, 2004년, 2017년, 2021년~현재 총리직을 수임했으며, 올리 전 총리는 2015, 2018~21년 총리직을 맡음.

그림 1. 네팔 및 주변국 지도



자료 Nepal Survey Department(검색일: 2022. 12. 5).

그림 2. 네팔 민주주의 지수 변화



자료: Center for Systemic Peace - Polity Project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글상자 1. 2022년 총선 기준 네팔의 주요 정당 및 정당연합

- 2022년 12월 5일 기준 총 178개의 정당이 네팔 선거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4대 주요 정당은 다음과 같음.

정당명	창당 연도	당대표	정당 성향
- 네팔 회의당(Nepali Congress) - 약칭: NC	1950년	셰르 바두르 데우바 (Sher Bahadur Deuba)	중도, 중도좌파
- 네팔 공산당(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Communist Party of Nepal(Unified Marxist-Leninist)) - 약칭: CPN-UML	1991년	케이피 샤르마 올리 (KP Sharma Oli)	좌파
- 네팔 공산당(마오주의)(Communist Party of Nepal(Maoist Centre)) - 약칭: CPN-MC	1994년	푸쉬파 카말 다할 (Pushpa Kamal Dahal)	극좌
- 네팔 공산당(통합 사회주의)(Communist Party of Nepal(Unified Socialist)) - 약칭: CPN-US	2021년	마다브 쿠마르 네팔 (Madhav Kumar Nepal)	좌파

자료: The official portal of Government of Nepal-List of political parties 웹사이트(검색일: 2022. 12. 5).

- 2022년 12월 5일 기준 주요 정당연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정당명	정당 성향
중심 정당	- 민주좌익동맹(Democratic Left Alliance) - 약칭: DLA - 네팔 공산당(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CPN-UML) 중심 동맹 - CPN-UML	- 중도좌파, 친인도
소속 정당	- CPN-MC - CPN-US - Loktantrik Samajwadi Party, Nepal - Rastriya Janamorcha	- 좌파, 친중국
정당 성향	- 네팔 회의당(NC) - Nepal Pariwar Dal - People's Socialist Party, Nepal - Rastriya Prajatantra Party	

자료: 각종 언론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요약(검색일: 2022. 12. 5).

- 원내 제1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와 연정 구성 과정에서의 정치적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함.
 - 코로나19 대응 실패, 부정부패 의혹 등으로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던 네팔 공산당(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이하 CPN-UML)의 올리 전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2021년 5월 네팔 의회에서 채택되었고, 7월 데우바 네팔 회의당 대표가 과거 올리 총리를 지지하던 네팔 공산당(마오주의, 이하 CPN-MC) 등과 연정을 구성하면서 신임 총리로 임명됨(글상자 1 참고).⁷⁾

■ 2022년 11월 20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현재 집권당인 네팔 회의당이 승리하였으나, 단독 과반(275석 중 138석)에는 실패해 연정 구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2022년 네팔 회의당은 2017년 총선 대비 26석 많은 89석을 차지한 반면 CPN-UML은 43석 감소한 78석을 확보하였으며, 이는 유권자들이 ‘정정 안정’을 지지한 것으로 분석됨(표 1 참고).
 - 네팔 회의당을 중심으로 한 현 정당연합이 확보한 총 의석수는 130석 이상으로, 재집권 가능성이 높음.
- 한편 CPN-UML을 포함한 여타 공산당의 지지도가 대폭 낮아졌는데, 이는 ‘파벌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피로감 및 심판으로 해석됨.
- 신생 정당 및 무소속 후보가 165석의 선거구에서 25석을 확보하는 등 ‘새 얼굴’의 약진과 유권자들의 ‘정치 세대교체’에 대한 갈망도 이번 총선의 특징이었음.⁸⁾
 - 네팔 미디어 News24 진행자인 라비 람미차네(Rabi Lamichane)가 2022년 7월에 창당한 Rastriya Swatantra당이 이번 총선에서 20석을 확보하는 큰 성과를 얻음.
 - 네팔 수도 카트만두(Kathmandu)의 제2선거구에서 승리한 Rastriya Swatantra당의 소비타 가우탐(Sobita Gautam)은 27세의 여성 정치인으로, “네팔 정치는 오래된 접근방식과 동일 인물이 항상 되풀이되었다”라며 “젊은 대표로서 국회에 신선한 담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힘.⁹⁾

표 1. 2022년 네팔 총선 결과

(단위: 하원 의석 수)

	정당	2022			2017 대비 증감	비고
		지역구	비례	합계		
1	네팔 회의당	57	32	89	▲26	
2	CPN-UML	44	34	78	▼43	
3	CPN-MC	18	14	32	▼21	
4	CPN-US	10	0	10	-	신생 정당
5	People’s Socialist Party, Nepal	7	5	12	▼22	
6	Rastriya Prajatantra Party	7	7	14	▲13	
7	Rastriya Swatantra Party	7	13	20	-	신생 정당
8	무소속(Independents)	5	-	5	▲4	
9	Loktantrik Samajwadi Party, Nepal	4	0	4	-	신생 정당
10	기타 군소 정당(신생 정당 포함)	6	5	11		
	총계	165	110	275		

자료: Election Commission of Nepal, <https://result.election.gov.np/>(검색일: 2022. 12. 8).

7) “Nepal’s acting prime minister wins confidence vote”(2021. 7. 20), *Economist Intelligence Unit*.

8) “Nepal to hold parliamentary election in November”(2022. 8. 4), *Al Jazeera*.

9) “New faces win Nepal polls, vow to ‘change political discourse’”(2022. 12. 5), *Al Jazeera*.

■ 2022년 네팔 총선의 주요 이슈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사회 회복’과 ‘강대국과의 외교관계’였음(표 2 참고).

- 고실업률, 고물가 등 경제 문제와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한 정당간의 책임 전가가 선거기간 동안 가열된 가운데, 주요 정당은 일자리 창출, 복지 증대, 인프라 확충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함.¹⁰⁾
 - 실업률은 2019년 3.1%에서 2021년 5.0%로 상승하였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 6월 이후 4개월 연속 8% 이상을 기록함.¹¹⁾
- 네팔은 수입 및 원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저소득 내륙국으로 정당간 정책에 큰 차이를 보인 ‘대외관계’가 주요 현안으로 부상하였고, 선거기간 동안 강도 높은 ‘프레임 전쟁’이 벌어짐.
 - 친중국 성향의 올리 전 총리는 네팔-중국 간 수송·운송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집권기간 동안 중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한 반면, 데우바 현 총리는 인도 및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왔음.¹²⁾

표 2. 네팔 회의당(NC)과 네팔 공산당(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CPN-UML)의 주요 공약

구분	네팔 회의당 (NC)	네팔 공산당(통합 마르크스-레닌주의) (CPN-UML)
경제 및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대 경제성장률 달성 - 향후 5년간 120만 개 일자리 창출 - 5년 내 관광객 200만 명 유치 - 연금수령 연령 68세에서 65세로 조정 - 1만 MW 규모의 전기 생산 - 농업, 정보통신, 에너지 분야 생산 및 수출 활성화 - FDI 적극 유치 - 3세 미만 유아 및 73세 이상 노령자 대상 무상의료 제공 - 친인척 사망 시 빈곤 가정에 1만 루피 규모의 위로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 달성 - 5년 내 10조 네팔루피 경제 규모 달성 - 250만 개 일자리 제공(매년 50만 개) - 임기 내 관광객 250만 명 유치 - 6,500MW 규모의 전기 생산 - 농업 생산량 증대와 공급 개선 - 월 최저임금 2만 5,000루피로 인상 - ‘Make in Nepal’ 캠페인을 통한 제조업 활성화
미국의 지원 프로그램 ‘네팔 콤팩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확한 언급 대신 도로 인프라 확충, 대중교통 서비스 확대, 녹색 및 재생 에너지 사용 증대 등의 중요성 언급
영토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네팔 간 영토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인도 및 중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도 의존도 축소 및 인도-네팔 영토 분쟁 해결

자료: 현지 언론 및 정당별 공약집을 바탕으로 저자 요약.

10) “What are the key issues in Nepal’s national elections?”(2022. 11. 18), *Al Jazeera*.

11) 현재 물가수준은 2015년 9월 신헌법 공포 이후 이에 반대하는 시위로 교역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2015년 12월, 11.6%) 이후 최고치임. CEIC 통계(검색일: 2022. 12. 5).

12) “Nepal polls: India, China and the US closely watch the outcome”(2022. 11. 21), *news9live*; “Nepali voters deliver a fractured mandate in parliamentary elections”(2022. 11. 29), *The Diplomat*.

2. 집권당의 과제와 정책 방향

가. IMF 프로그램 추진과 경제위기 극복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에 큰 타격을 받은 네팔은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고 있음.

- 네팔 경제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관광업이 위축되면서 대외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경제 성장세가 둔화됨.
 - 관광객 수가 2019년 120만 명에서 2020년에는 23만 명, 2021년에는 15만 명으로 감소하였고,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2022년 1~4월 관광객 수는 2019년 1~4월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함.¹³⁾
 -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가 2019/20년 0.9%에서 2020/21년 7.8%, 2021/22년 12.8%(속보치)로 확대되었고, GDP 대비 총 외환보유액은 36.0%에서 32.7%, 25.1%(속보치)로 감소함.¹⁴⁾
 - 네팔 경제는 2019/20년 4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¹⁵⁾
- 네팔 루피화 가치가 인도 루피화에 고정되어 있어 네팔 중앙은행에서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하는 데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네팔 정부는 대외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함.
 - IMF는 코로나19 팬데믹 1차 확산의 피해를 본 네팔에 2020년 5월 약 2억 달러의 긴급차관을 제공하였고, 2차 확산으로 경제회복이 지연되자 2022년 1월 확장차관제도를 통해 약 4억 달러의 지원을 결정함.
 - 총 38개월 동안 진행되는 확장차관제도를 통해 네팔은 약 1억 달러를 2022년 1월 즉시 지원받았고, 나머지 자금은 2022년 6월과 2025년 1월 사이 여섯 차례에 나누어 지원받을 계획임.

■ 네팔 정부가 데우바 총리 체제하에서 이미 시작한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의 긴축정책 기초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IMF 주도의 경제개혁에 대한 반감이 여전히 존재해 마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네팔에서는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의 ‘안정화’ 단계를 거쳐 2023년 초부터 ‘거시·구조조정’ 단계가 시작될 예정임.¹⁶⁾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제공한 세제혜택 축소 △정부부처간 중복지출 문제 개선 △세수 증대 △재정 투명성 확립 △부정부패 척결 등을 통해 GDP 대비 재정적자를 구제금융 결정 당시 2021/22년 전망치인 6.3%에서 2024/25년 3.5%로 축소하는 것이 목표임.
 -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도입한 금융시장 지원책 철회 △신용 확대 제한 △금융시장 감독 및 감시 강화 등을 통해 금융시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그러나 세부적인 정책 추진 과정에서 네팔 정부와 IMF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네팔 정부에서 외환보유고가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며 2022년 4월 휴대전화, 자동차 등 사치품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기 시작하였는데, IMF는 이에 반대하면서 확장차관제도의 두 번째 자금 지원 시행을 연기함.¹⁷⁾

13) Nepal Rastra Bank(2022), "Database on the Nepalese economy: Real sector-Monthly-Tourist arrivals."

14) 네팔 회계연도 기준임. 예를 들어 2019/20년의 경우 2019. 7. 16~2019. 7. 15을 의미함. Nepal Rastra Bank(2022), "Macroeconomic indicators of Nepal-November 2022."

15) 네팔의 경제성장률은 2018/19년 6.7%에서 2019/20년 -2.4%로 하락함. 네팔 통계청(검색일: 2022. 12. 12).

16) IMF(2022), "Nepal: Request for an arrangement under the Extended Credit Facility," IMF Country Report, No. 22/24.

나. 인도와 중국 간 균형외교

■ 2010년대 중후반에 네팔-인도의 외교관계가 악화된 반면 네팔-중국의 관계는 강화됨.

- 2015년 인도가 네팔의 새로운 헌법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후 양국의 관계가 급속하게 냉각됨.
 - 네팔 테라이(Terai) 지역에 거주하고 인도 북부지역과 문화적 관계가 깊은 마데시(Madhesi)족이 “신헌법의 연방주 획정이 공정한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반발함.¹⁸⁾
 - 마데시족의 시위로 인해 인도와 네팔 간 교역이 어려워지자 생필품 부족 현상이 발생했고, 마데시족 차별에 대해 인도정부가 우려를 표명하자 네팔 정부는 인도정부가 ‘국경 봉쇄를 조장해 인도적 위기를 유발했다’고 비판함.¹⁹⁾
- 인도정부가 2019년 잠무·카슈미르를 연방직할지로 지정한 후 공개한 새 지도에 인도·네팔 영토분쟁 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시하고, 2020년에는 해당 지역에 도로를 개통하자 네팔에서 反인도 민족주의 성향이 심화됨.²⁰⁾
- 네팔에서는 1950년에 체결한 인도-네팔 평화우호조약이 네팔의 독립적인 외교정책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조약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²¹⁾
- 2010년대 중반 네팔에서 인도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²²⁾의 위험성을 체감하고 있던 가운데, 중국이 티베트의 라사와 네팔의 카트만두를 연결하는 철도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등 네팔과의 경제관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017년 네팔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에 공식적으로 참여함.²³⁾
- 네팔의 여러 공산당 세력이 통합되었던 2019~21년 시기에 네팔-중국의 외교적 관계가 강화되었음.
 - 2019년 시진핑 주석이 중국 주석으로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네팔을 방문하였고, 양국 정부는 ‘협력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였으며, 양국 공산당은 향후 교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²⁴⁾

■ 과거 정부의 편향적인 외교정책을 비판해오던 데우바 총리가 2021년에 집권하면서 네팔-인도 간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으며, 2022년 총선 승리 이후 특정 국가에 치우치지 않은 균형외교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네팔과 인도 간 경제관계를 강화하려는 방안이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가 줄어들면서 양국의 경제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인도정부는 네팔에 향후 5년간 화학비료를 공급하고 네팔로부터 잉여전력을 수입하기로 합의하였고, 네팔 정부는 인도의 통합결제 인터페이스(UPI: United Payments Interface)를 도입하기로 결정함.²⁵⁾

17) Prasain, Krishana(2022. 11. 24), “Nepal reviewing import ban after IMF prodding,” *The Kathmandu Post*.

18) Ojha, Hemant(2015. 11. 27), “The India-Nepal crisis,” *The Diplomat*.

19) “Nepal PM wants India to lift undeclared blockade”(2015. 11. 15), *NDTV*.

20) Xavier, Constantino(2020. 6. 11), “Interpreting the India-Nepal border dispute,” Brookings Institution.

21) Basu, Nayamina(2021. 1. 24), “What the India-Nepal treaty is, and why Nepal has problems with it,” *The Print Nayak*,

Nihar(2010), “India-Nepal Peace and Friendship treaty(1950): Does it require revision?” *Strategic Analysis*,34(4): 579-593.

22) 2005/06~2020/21년 네팔의 수출과 수입에서 인도는 각각 연평균 65%와 63%를 차지함. Nepal Rastra Bank(2022), “Database on the Nepalese economy: External sector-Yearly-Exports, Imports.”

23) Baruah, Darshana(2018), “India’s answer to the Belt and Road: A road map for South Asia,” Carnegie India.

24) “Friendship key in China’s ties with Nepal”(2019. 10. 14), *China Daily*.

- 네팔 정부는 중국과 노골적으로 거리를 두지는 않겠지만, 인도 및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과거 올리 총리 정부에서 추구한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는 지양할 것으로 예상된다.
 - 네팔 정부가 인도와의 국경 문제와 함께 중국과의 국경 문제도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전망됨.²⁶⁾

다. 미국 원조 프로그램 진행

■ 2017년 미국 해외원조기구 MCC(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와 네팔 정부는 대규모 자원계획인 ‘네팔 콤팩트’에 합의했으나, 네팔 내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해당 계획은 2022년이 되어서야 의회를 통과함.²⁷⁾

- 네팔 콤팩트의 사업 규모는 최대 6억 3,000만 달러로, 네팔의 인프라 개선이 주된 목적임.²⁸⁾
 - 미국정부에서는 전력 송전선 관련 사업에 3억 9,820만 달러, 도로 유지보수 관련 사업에 5,230만 달러, 사업 운영비에 4,000만 달러, 사업 관리 및 분석에 950만 달러 등 총 5억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
 - 네팔 정부에서는 전력 송전선 관련 사업에 1억 2,090만 달러, 도로 유지보수 관련 사업에 210만 달러, 사업 운영비에 700만 달러 등 총 1억 3,000만 달러를 투입할 계획임.
- 그러나 정치권에서 ‘네팔 콤팩트의 법적 지위’와 ‘미국-중국 갈등구도 속 네팔의 입장’에 대한 논쟁이 가열되면서 네팔 콤팩트의 의회 비준이 어려움을 겪음.
 - 네팔 콤팩트 합의문은 ‘합의문의 조항과 네팔 국내법의 충돌이 있을 시 전자가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네팔 콤팩트에 반대하는 세력은 해당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미국의 고위관계자가 “MCC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서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한 후 친중 정치 세력에서 ‘미군이 네팔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비판하며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지연시킴.
- 2022년 2월 네팔 정부가 다양한 정파들과의 협상을 통해 도출한 ‘12대 해석선언’과 함께 네팔 콤팩트 합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됨.
 - 해석선언은 ‘네팔 콤팩트 참여는 인도태평양전략 등 미국의 전략, 군사, 안보 협력체에 대한 참여를 의미하지 않고, 네팔 헌법이 네팔 콤팩트 및 관련 협정보다 우선시된다는 점’ 등을 명시함.

■ 네팔 콤팩트는 데우바 총리 집권 4기에 미국과 합의되었고, 5기에 의회에서 비준이 된 ‘데우바 총리의 대표 정책과제’로, 향후 관련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5년간 네팔 콤팩트의 인프라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네팔의 연결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력] 네팔에 300km의 고압 송전선과 3개의 변전소를 건설하고 네팔전력위원회에 전력산업 규제 및 전기요금 설정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25) “Nepal and India step up economic co-operation,”(2022. 3. 7),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6) “Nepali Congress claims border dispute with China in its official document”(2021. 10. 29), *Nepal Live Today*.

27) Ghimire, Binod(2022. 1. 9), “Why the MCC compact courted controversy in Nepal,” *The Kathmandu Post*; Gurung, Fred & Amit Ranjan(2022. 3. 22), “Ratification of the MCC Nepal Compact: Domestic political implications,” *ISAS Insights*.

28)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 Nepal Compact 웹사이트.

- [도로] 네팔 내 최대 305km의 전략적 도로망 유지보수 작업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도로부와 도로위원회에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 네팔의 대외관계에서 미국의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최근 네팔 내 영향력이 커진 중국을 미국이 견제하는 구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5월 네팔 정부는 네팔이 저소득국가에서 중소득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해외원조기구 USAID에서 향후 5년간 6억 5,900만 달러의 원조를 제공하는 방안에 합의함.²⁹⁾

3. 시사점

■ 2022년 총선에서 당시 집권당인 네팔 회의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했으나, 과반 확보에는 실패해 네팔의 정치적 불안정은 총선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네팔 회의당은 기존의 동맹을 중심으로 신생 정당 및 무소속 하원의원과 연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CPN-UML은 공산당 계열의 결집을 호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총선에서 하원 의석을 득한 신생 정당 및 젊은 층의 의원들이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데우바 현 총리의 퇴진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며, 향후 네팔 정치에서 신진 세력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 네팔의 새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다룰 것으로 예상됨.

- 네팔 정부는 종사자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광업 정상화 및 농업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의료 인프라, 전력생산 인프라, 교통 인프라 확충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으로 보임.

■ 네팔의 새 정부는 '안정'을 대외정책의 최우선순위로 두고 다양한 국가 및 국제기구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회복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IMF 프로그램의 개혁정책을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추진하되, 특정 정책에 대해서는 국내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음.
- 인도와의 외교관계를 회복하고 중국과는 적절한 수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양국으로부터 개발자금을 확보하고, 네팔-인도, 네팔-중국 국경 문제 해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 총선 승리를 이끈 데우바 총리의 대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는 '네팔 콤팩트'의 전력 및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미국과의 외교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29) Nepal Ministry of Finance & USAID(2022. 5. 5), "Nepal and United States sign new 5-year development assistance agreement," Ministry of Finance Press Release.

- 우리 정부는 남아시아 정세 안정화와 네팔의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21년 기준 한국과 네팔의 총교역 규모는 8,900만 달러로 크지는 않으나,³⁰⁾ 네팔은 우리나라의 ODA 중점협력국이며, 양국의 산업 및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음.
 - 2007년 한국과 네팔 간 고용허가제(EPS: Employment Permit System)에 대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 2019년 3월 기준 4만 6천여 명의 네팔인이 한국에서 근로한 것으로 집계됨.³¹⁾
- 네팔이 원조 공여국의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인프라 사업 △경제 안정성 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인력 교육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네팔에서는 핵심 산업인 농업과 관광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통 인프라 개발사업과 교역 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력발전소 개발사업에 대한 수요가 높음.
 -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 내 경제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 및 금융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네팔 정부에 한국정부는 거시경제 모니터링 및 탈세 방지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원할 수 있음.³²⁾
 - 한국에서 근무한 네팔 노동자들의 본국 복귀, 재정착 및 창업을 지원하여 네팔 경제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³³⁾ KIEP

30) 한국의 대네팔 주요 수출 품목은 기계류, 광학/의료 측정 정밀기기, 차량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 및 섬유제품으로 대네팔 교역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무역협회 통계(검색일: 2022. 12. 8).

31) 「2022 ODA 코리아」, 『네팔 국가협력 전략』, p. 1.

32) Shrestha, Prithvi Man(2022. 10. 24), "Debt concern grows as government borrowing doubles in three years," *The Kathmandu Post*.

33) 「돌아간 네팔 노동자들의 재정착 돕는 코이카」(2022. 6. 28), 『매거진 코이카』.